

보도일시	2022. 1. 27.(목) 조간 * 인터넷 2022. 1. 26.(수) 12:00 이후 / 총 6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	과 장 이민재 서기관 김경민 사무관 최충운	044-202-7553 044-202-7528 044-202-7618
	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	과 장 이경근 감독관 공용상	02-2250-5862 02-2250-5881
	충북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	과 장 한삼남 감독관 이규호	032-460-4660 032-460-4586
	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	과 장 추광호 감독관 김동근	051-850-6384 051-850-6468
	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	과 장 최성우 감독관 정우성	053-667-6287 053-667-6285
	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	과 장 김동리 감독관 정찬섭	062-975-6376 062-975-6371
	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	과 장 김선재 감독관 김지은	042-480-6280 042-480-6239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고용노동부, 「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」 발표

- ◇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「현장 예방 점검의 날」 집중 운영
- ◇ 지역·업종 특성을 반영한 「기획감독」 강화, 반복·상습체불 근절 주력
- ◇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정기감독 전 「교육·자가진단」 적극 제공

- 고용노동부 (장관 안경덕)는 1월 26일(수) 「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」을 발표했다
- 2022년에는 노동권의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·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,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.
- 먼저,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·비정규직 등 취약계층,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.

- 또한,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별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,
-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동종·유사업종의 위법·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.
- 이를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,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한다.

□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【정기감독】 청년·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

↳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

① [분야별 정기감독]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집중, 교육·자가진단 활용

- 분야별 정기감독은 청년 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·여성·외국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, 이와 함께 비정규직 보호,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.
- 다만, 코로나19 지속 등 경제 여건이 아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, 정기감독은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 실시 전에 교육·자가진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.
- 즉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,
- 사업장에서 자가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지원할 예정이다.
-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근로감독·신고사건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많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.

② [현장 예방 점검의 날] 『4대 기초노동질서』 준수 확산 추진

- 영세 사업장은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법 준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취약한 분야로 손꼽힌다.
-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「현장 예방 점검의 날」을 운영, 지방노동관서별로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*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.

▶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준수 ④ 임금체불 예방

- 다만, 영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「현장 예방점검」 전에 사업장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를 충분히 진행할 계획이다.
- 계도 기간 중에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고, 자가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콘텐츠도 지원하고,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

③ [노무관리지도·점검]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감독관이 현장 지도·점검

-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·점검을 강화한다.
-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위법한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하고,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.

【수시감독】 지역별·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 강화

↳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·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

- 노동 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·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.

- 예를 들어, 청년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음에도 법 위반 우려 목소리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만연해 있을 수 있어 우선 검토한다.

- 또한, 지역별로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하여 실시한다.

【예시】

- ▶ ① 서울청 (온라인 강의·쇼핑업체) ② 중부청 (의약품 제조업체)
- ③ 부산청 (컴퓨터 프로그래밍업체) ④ 대구청 (소프트웨어 개발업체)
- ⑤ 광주청 (지자체 산하 공공기관) ⑥ 대전청 (중대형 유통업체)

-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별 특정 업종의 감독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신속하게 전파되어 전국적으로 동종·유사 업종에서 비슷한 법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.

- 이와 함께, 반복·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형 감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.

-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,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.

【특별감독】 재발방지 및 근본적 문제 해소, 감독 결과 확산에 주력

↳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

- 노동자에 대한 폭행,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.

- 특별감독 시에는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 위법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며,

-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적극 병행하여 재발 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.

- 특별감독 이후에는 그 결과와 메시지가 동종·유사 업종은 물론 전국에 확산되어 우리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.

【근로감독 효과 제고】 현장 소통 강화 및 감독 결과 확산 체계화
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 추진

- 근로감독 실시 전에 미리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, 감독 과정에서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 - 감독 후 결과의 공유와 메시지 확산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.
 - 우선 특별감독과 기획형 수시감독의 경우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노동자 보호 등 국민의 알권리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감독 결과를 공개한다.
 - 또한 업종별·지역별로 감독 관련 정보와 메시지가 신속하게 확산 되도록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·단체, 지역별 산업단지 등과 협업하여 업종별 대표기업 간담회, 지역별 설명회, 지역별 네트워킹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 - 또한, 근로감독 이후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「일터혁신 컨설팅*」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근로감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무관리체계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.
- * 중소기업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, 근로시간 단축, 임금·평가체계 개선 등에 대해 무료 컨설팅 (노사발전재단으로 신청)
- 이와 함께,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, 디지털 증거분석 강화 등 근로감독 인프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

-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,
 - “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·자가진단·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”라면서
 - “영세·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,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”라고 강조했다.
 - 이를 위해 “지자체, 업종별 협회·단체 등과도 협력하여 영세·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”라고 말했다.
 - 이와 함께, 전국의 지방관서장에게 “변화된 노동행정을 국민 한분 한분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이 핵심”이라면서,
 - “특히, 영세 사업장에 대한 「현장 예방점검의 날」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서기관(☎044-202-7528), 최충운 사무관(☎044-202-7618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